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학위 논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은 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상헌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은 지

상기자의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원장 정 용 덕 (인)

부위원장 박 정 훈 (인)

위 원 김 상 헌 (인)

국문 초록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은 재정 확대가 주요 대책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대공황이나 외환위기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침체된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상이한 규모의 감세, 다양한 분야의 지출확대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성장촉진패키지(stimulus package)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government expenditure)에 관한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으나, 금번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이기 위해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GDP 성장률, 일인당 GDP 등의 주요 독립변수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각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도출한 후, 추세선과 경제위기 당시인 2008~9년의 실제치의 차이를 경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GDP 대비 (정부지출-정부지출의 추세)가 된다.

분석결과, GDP 성장률과 종속변수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은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당시 큰 타격을 받아 GDP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국가일수록 이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인당

GDP와 종속변수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인당 GDP가 경제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때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정부부채비율의 경우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자원가용능력을 재정 여력(Fiscal space)으로 보았을 때, 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정부부채비율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변수에 따라 누락된 국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자료의 불완전성이나 보다 엄밀한 이론적 고찰의 부족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경제위기(economic crisis),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 성장촉진패키지(stimulus package), 재정 여력(fiscal space)

학 번 : 2010 - 23849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6
2. 정치적 요인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7
3. 경기변동과 재정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8
4. 조세와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	8
5. 재정정책과 재정수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9
6. 경기불황과 경제구조 재구성에 관한 연구	10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논의	17
제1절 재정정책의 의의	17
1. 재정정책의 목표	17
2.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19
3. 경기조절 정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의 장단점	20

제2절 현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	21
1. 개요	21
2. 현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구성	28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모형	30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30
제2절 연구설계	31
1. 변수의 설정	31
1.1 종속변수	31
1.2 독립변수	31
2. 연구의 분석틀	33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4
1. 자료의 수집	34
2. 분석방법	37
제4장 분석결과	39
제1절 기술통계 및 예비탐색	39

제2절 모형의 추정결과	49
제5장 결론	5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3
제2절 연구의 함의	5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	57
참고문헌	5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접어들면서 실물경제위기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동반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나아가 이번 경제 위기는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규모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20세기 초 대공황과 비교되기까지 한다.

20세기 대표적 경제위기 역사인 대공황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수정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재정 확대가 중심이 된 수요 진작 정책을 통해 대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되어야 하고, 나아가 복지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향 설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인식되는 스웨덴조차 복지에서의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¹⁾.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는 대공황이나

1) 안중범 (2009),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정부역할과 재정정책”, 계간 시대정신 2009년 봄호

외환위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등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확대가 주요 대책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응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그 예로 감세, 다양한 분야의 지출확대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패키지(Stimulus Package)를 들 수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선택한 재정정책의 종류는 상이하 며, 정도에서도 차이가 크다. IMF가 2008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될 성장촉진 패키지의 크기는 미국이 GDP 의 4.8%에 이르는 반면 이탈리아는 0.3%, 인도는 0.5%에 그치고 있다.

<표 1 >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비용(GDP 대비)				
	2008	2009	2010	합계
Argentina	0	1.5	...	1.5
Australia	1.2	2.5	2.1	5.8
Brazil	0	0.6	0.5	1.1
Canada	0	1.9	1.7	3.6
China	0.4	3.1	2.7	6.2
France	0	0.7	0.8	1.5
Germany	0	1.6	2	3.6
India 3/ 4/	0.6	0.6	0.6	1.8
Indonesia	0	1.4	0.6	2.0
Italy	0	0.2	0.1	0.3

Japan 5/	0.3	2.4	1.8	4.5
Korea	1.1	3.7	1.2	6.0
Mexico	0	1.5	...	1.5
Russia	0	4.1	1.3	5.4
Saudi Arabia	2.4	3.3	3.5	9.2
South Africa 3/ 6/	2.3	3	2.1	7.4
Spain 7/	1.9	2.3	...	4.2
Turkey 8/	0	0.8	0.3	1.1
United Kingdom	0.2	1.5	0	1.7
United States 9/	1.1	2	1.8	4.9
Total (PPP-weighted average)	0.6	2	1.5	4.1

Source: IMF staff estimates.

Note: 1) Figures reflect the budgetary cost of crisis-related discretionary measures in each year compared to 2007 (baseline), based on measures announced through mid-May 2009. They do not include (i) "below-the-line" operations that involve acquisition of assets (including financial sector support) or (ii) measures that were already planned for. Some figures represent staff's preliminary analysis.

2) "..." is used for countries for which no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size of their fiscal packages.

3) Fiscal year basis.

4) Includes only on-budget measures. Additional off-budget measures amount to 0.8 percent of GDP in 2008/09 and 1.6 percent of GDP in 2009/10 (including 0.4 percent of GDP for bank recapitalization).

5) Based on staff preliminary analysis, financial sector-related measures of 0.1 percent of GDP in 2008, 0.5 percent of GDP in 2009, and 0.2 percent of GDP in 2010 are excluded. These measures cover both subsidies to and capital injections i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G-20 국가 중 GDP 대비 비중으로 계산할 때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7.4%로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적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이탈리아(0.3%), 브라질(1.1%), 터키(1.1%), 아르헨티나(1.5%), 프랑스(1.5%), 멕시코(1.5%) 등을 들 수 있다. 전체 20개 국가들의 평균은 4.1%로 나타났다. 위 표에서 보았듯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G-20 국가들이 채택한 재정정책의 규모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정책의 규모가 상이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IMF(2009, 02)²⁾는 두 종류의 요인들을 해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의 차이이고 두 번째는 재정 여력(Fiscal space)의 차이이다.³⁾ IMF는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의 차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변수로 자동안정화 크기,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각 국가가 겪게 되는 생산차(output gap)의 크기, 각 국가의 승수효과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 재정 여력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요인들로는 재정적자, 정부부채, 이자율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IMF가 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의거한 일련의 ‘가능성 있는 근거’일 뿐, 실증분석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는데 가

2)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3) 김상현(2011),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학 연구동향”, 재인용

장 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분석 자료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온라인 오픈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세계은행 온라인 통계 데이터는 현재 각종 경제 및 금융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매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최근 연도로부터 2년 전의 수치까지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회원국 186 개국을 포함한 총 210 국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친 세계 208개국의 정부지출과 일인당 GDP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다. 경제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다. 변수에 따라 누락된 국가가 있어 실제 분석에 사용된 국가의 수는 이보다 제한된다. 또한 국가별 자료의 시간범주 역시 포함되는 변수에 따라 시기가 줄어들 수 있다. 변수들의 수집시기가 겹치는 기간이 크지 않은 경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OECD Revenue Statistics의 자료를 사용하여 세계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합성 관점에서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재정정책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논의 2.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과 정치적 상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3. 정부지출과 경기변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4. 조세와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 5. 재정정책과 재정수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부류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의 경제위기의 크기와 대응정책에 주목한 연구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고전학파이론에 의하면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경제는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을 유지하므로 안정화정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대공황의 발생과 함께 고전학파이론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케인즈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케인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실시를 주장했다. 196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프리드만을 비롯한 통화주의자들은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경제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화폐 공급량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새고전학파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직까지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안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정책당국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준칙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정치적 요인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Peter Gourevitch(1986)은 “Politics in Hard Times”에서 3회에 걸친 세계경제위기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분석하고 있다. Gourevitch는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책은 ‘정치적 산물’로 보며, 경제위기 당시 각국의 정치사회 주요 세력들이 자기 세력들의 입지에 유리한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합과 분열을 반복하며 보조금, 감세, 경기활성화 대책 등 여러 위기 대응책을 구사함을 보여주었다.

Katzenstein(1985)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위기시 행위자가 어떤 정책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온 자본주의 형태와 국가의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capacity)이 맞물려 최종 정책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책 형성의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책 변화 등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번 경제위기가 거의 동시에 각국에 영향을 끼쳤고 때문에 초기에 빠른 대응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를 분석하고 적합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방법 및 정책을 위주로 대응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경기변동과 재정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기변동과 재정정책 사이의 관계가 서로 다른 형태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이 있다. Lane(2003)은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정부지출이 대체적으로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부지출 가운데 특히 정부소비지출(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경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유형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Fiorito and Kollintzas, 1994; Talvi and Vegh, 2000)⁴⁾. Lane(2003)은 산출물 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에 기초하여 정부지출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정부지출은 대체적으로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논함에 있어서 정책 효과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정책운영자의 합리성 여부에 의존하는 정책집행의 시의적절성(timeliness) 역시 고려대상이 된다.⁵⁾

4. 조세와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

4)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경기안정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 19집 제 2호, 재인용

5) 허석균 (2007),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KII 연구보고서

조세와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 중에서 Huang and Lin(1993) 그리고 Strazicich(1997)와 같은 미국 대상 연구들은 미국은 주로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세징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재정의 기조가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arro(1979)의 조세평탄화가설(the tax smoothing hypothesis)에 의하면, 적절한 조세 징수규칙은 세율을 시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같은 조세징수에 따른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시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경제의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율을 변화시켜 경기 순환에 대응하기 보다는 공채발행의 증감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⁶⁾.

5. 재정정책과 재정수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Wu and Yosha(2001)은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선진국에서 재정수지가 경기순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경기가 침체된 경우는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재정정책이 나타나고 경기가 호황인 경우는 수축적인 재정수지의 기조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경기변동과 재정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재정정책은 대체로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6)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경기안정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 19집 제 2호, 재인용

대한 기존 문헌에서는 전반적인 재정정책의 기조가 경기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의 진폭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경기가 호황인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나타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수축적으로 사용되어 재정정책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Gavin and Perotti, 1997).

성태윤·이영(2005)는 경기변동과 재정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에서 Talvi and Vegh(2000)는 중남미 국가 이외에도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에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수행되고 불황기에는 수축적 재정정책이 수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경기조절기능에 역행하는 재정정책기조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칠레,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는 경기상승 시기에 수축적인 정부지출정책이 수행되고 경기하강 시기에 확장적인 정부지출정책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Agenor, McDermott and Prasad, 1999)⁷⁾.

6. 경기불황과 경제구조 재구성에 관한 연구

경기불황 시기에 확장적인 정부지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7)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경기안정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 19집 제 2호

연구들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 이후 불황에 직면해 경제구조를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도시 간의 분업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당시 도시들은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성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Fainstein,1995). Phillips(1980)은 1948년부터 1976년까지의 미국 전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지역사회개발비에 속하는 교통관련 지출이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근거로 1950년대 후반, 경기침체 때에는 지방고속도로 지출비의 성장률이 전체 지방정부지출의 성장률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⁸⁾

<표 2> 기존연구 요약

대주제	저자/연도	대상국가	독립변수	결과
경기변동과 재정정책 사이에 대한 연구	Fiorito and Kollintzas, 1994	G7 국가	정부의 소비지출	정부의 소비지출과 경제의 총생산과 유형화된 관계 보이지 않음
	Talvi and Vegh,	G7 외 49개국	정부의 소비지출	G7 국가의 경우 정부소비와 경기변동과의 상

8) 권경환(2004), “IMF경제위기가 지방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분석”(재인용)

	2000			관 관계는 “0”에 가까우며 그 외 국가들 역시 명확한 관계 보이지 않음
	Lane, 2003	OECD	정부의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은 대체적으로 경기역행적 정부소비부문은 경기순행적
조세와 경기 변동에 대한 연구	Huang and Lin, 1993	미국	미국의 연간 재정 관련자료를 이용한 조세평탄화 가설에 대한 검정	조세평탄화 가설이 미국의 재정관련 자료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부합함
	Strazicich, 1997	미국, 캐나다	세율, 재정수입	경기호황시 재정수입 증가
정치적 요	Peter	미국, 영국,	경제위기에	

인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지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Gourevitch(1986)	프랑스, 독일, 스웨덴	대응한 재정지출 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책은 ‘정치적 산물’임
	Katzenstein(1985)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소유립국가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지출 변화	각 국가의 역사 및 경로 의존성에 따름
재정정책과 재정수지에 대한 연구	Wu and Yosha, 2001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	정부예산기조	경기호황인 경우 정부예산 흑자가 증가, 경기침체시 정부예산 흑자 감소
	Gavin	라틴아메리카	정부지출	

a n d Perotti, 1997	13개국		경기 호황 일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Agenor, McDerm ott and Prasad, 1999	우리나라	재정수지	우리나라 재 정수지의 경 기탄력성 추 정 결 과 , OLS계수값 은 0.27(t 값 은 2.51)

한편,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Shachmurove(2010)는 미국을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경제위기를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고, 과거의 경제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를 비교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예외가 아닌 중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다룬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Aleksashenko(2009), Institute of Contemporary Development(2009) 등은 러시아를 다루고 있고, 노르딕 국가들에 대한 연구로는 Gylfason 외(2010)가 있다. 한편, Socol 외(2011)는 루마니아의 사례를 고찰하였다⁹⁾.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로는 태국의 경제위기를 다룬 Jitsuchon(2010)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다룬 Abdih 외(2010)를

9) 김상헌 (2011),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학 연구동향”, 한국재정학회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슬로베니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가나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

<표 3> 2008년 경제위기와 관련된 연구

대주제	저자/연도	대상국가	독립변수	결과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연구	Shachmurove (2010)	미국	1800년대 이후 미국재정지출의 변화	역사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부지출이 늘어남
	Aleksashenko (2009)	러시아	섹터별 GDP성장률	모든 섹터에서 성장률이 2.5%를 넘지 못함
	Gylfason 외 (2010)	노르딕 국가	노르딕 국가들의 경제위기 시기의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그들 국가들의 Vulnerability와 Resilience를 보여줌	
	Jitsuchon(2010)	태국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태국의 stimulus package	주로 labor market을 대상으로 한 성장촉진 패키지

				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Abdih 외 (2010)	중동, 중앙아시아	중 동 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Fiscal Effectiveness 지표	국가부채 비율이 작은 국가일 수록 유효성이 크게 나타남

위와 같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경기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 논란과 더불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금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재정 여력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지출 변화 정도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 이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인데 근거하거나, 이번 경제위기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짧아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¹⁰⁾. 아니면 학자들의 관심이 국가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경제위기와 정부지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편수가 적은 것 일수도 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본 연구는, 경제위기의 예외가 아닌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수립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10) 김상현 (2011),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책 연구동향”, 한국재정학회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재정정책의 의의¹¹⁾

1. 재정정책의 목표

재정정책의 목표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완전고용”의 실현은 여전히 재정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실업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 각국의 재정정책의 당국은 실업문제에 관하여 완벽한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실업의 원인이 다양한데 재정정책이 실업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 때문이다. 실업의 원인이 생산자원의 부족이나 수요구조의 변화 혹은 생산기술의 변화 등과 같은 보다 구조적인 것이라면, 재정정책이 실업의 해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작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재정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을 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인류의 가장 큰 경제적 해악의 하나로 인식될 만큼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적이 아닐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생산에 대한 경

11) 본 절의 주요 내용은 <재정학>(소병희, 2008)를 참고함

제주체의 기여와 관계없이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모든 생산요소나 자산이 동일한 속도로 상승하지 않으므로 가격이 보다 느린 속도로 상승하는 생산요소나 자산의 소유자에게 소득 및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산요소나 자산의 상대가격의 변화는 이들 생산요소나 자산의 생산적 기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생산요소나 자산을 정산적인 생산 활동에 투입하여 소득을 얻거나 부를 증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용도에 투입하려고 하므로 경제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는 것이다.

세 번째 재정정책의 목표로 국제수지 및 환율을 들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성립된 IMF 체제에서는 국제경제의 질서 있는 발전이 각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인식하여 각 가맹국이 합의된 고정환율을 유지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대외균형은 각국 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1971년에 미국은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을 중지함으로써 IMF체제는 사실상 종식되었고 1973년 이후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각국의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급관계에 따라 변동하게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과도한 불균형이 시정되도록 하되, 환율의 일시적인 교란이나 투기적 요인에 의한 갑작스런 변동이 없도록 정책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 환율의 안정적인 변동은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또한 재정정책은 국제수지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수지를 결정하는 수입수요는 국민소득수준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데 정부지출이나 조세의 변화는 국민소득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수지는 또한 외국의 물가수준에 비한 자국의 물가수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데 정부지출이나 조세의 변화는 자국의 물가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점에서 환율과 바람직한 국제수지상태는 오늘날 재정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된 것이다.

2.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제 2차 대전 이후 경제성장은 재정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 혹은 경제발전은 국가의 중대 목표의 하나로 전제하게 되었다. 여기서 경제성장이라 함은 경제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자연적인 경제적 힘에 대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이르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경제성장과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인식된 것이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신고전학과경제학의 단점을 극복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전개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의 변화나 조세 정책에 따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재정정책은 현재까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의 재정정책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저축의 동원, 경제발전 기구에 대한 지원, 경제개발의 목적을 위한 재원의 배분 등을 통한 경제발전의 촉진과 지원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3. 경기조절 정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의 장단점

경기조절 정책으로서 재정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아짐에 따라 경기조절 정책으로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조절정책으로서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둘째, 개방화를 통해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외환시장개입의 부작용과 대외무역마찰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 환율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재정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내부시차(implementation lags), 외부시차(impact lag)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경기조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의 금리결정은 내부시차가 짧은 편이나,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 의회의 동의 등이 필요하므로 내부시차가 긴 편이다. 외부시차 역시 이론적으로는 재정정책의 외부시차가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통화정책만큼 재정정책의 외부시차도 길고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비가역성과 재정규율의 약화를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경기상황이 변하여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통화정책은 긴축과 팽창 정책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으나 재정정책은 지출 규모의 조정이 쉽지 않다. 특히 이전지출(transfer payment)등을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감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으로 인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정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자주 사용할 경우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재정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해야 하므로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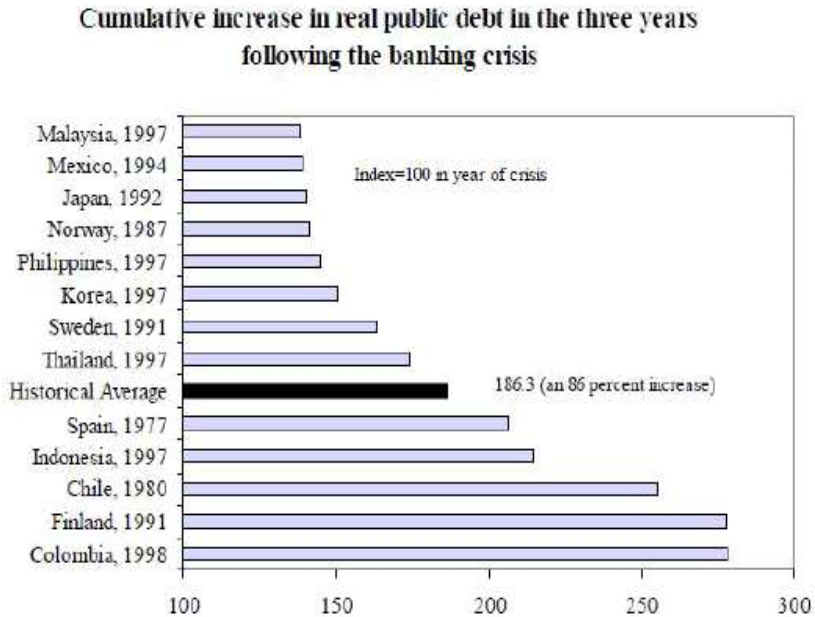
제2절 현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

1. 개요

세계적 금융위기로 촉발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번 경제 위기는 그 원인으로 큰 폭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감소,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투자 유보, 신용경색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는 총수요 격감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전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통상적인 재정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Reinhart and Rogoff(2009)가 경제위기 이후 거시경제에 나타나는 주요 현상들을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주식가격 역시 3.5년 동안 55%가 하락한다. 실물 경제에 있어서 실업률은 4년 동안 7%p 증가하고, 산출은 9% 감소한다. 국가재정에 있어서, 국가채무의 실질가격이 86% 증가하게 되고, 경기 불황기에 발생한 세수 결손은 금융위기 이후 국채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의 핵심요인이 된다.¹²⁾

<그림 1>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R & R(2009)



출처: Reinhart and Rogoff(2009)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의 기초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재정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일반정부 및 국가채무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및 국가채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20%내외를 유지하다가 1980년대 전반기부터 1990년 말 외환위기 직전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1997년부터 2008년까지 248.7조원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일반정부 채무 증가는 외환

12) 이영(2011),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재인용

위기로 인한 것이다. 외환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견실한 위기대응 여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평가 된다¹³⁾.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이전 재정건전성 정도는 외국과 비교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7% 수준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가채무 현황과 GDP 대비 비중

13)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및 일반정부 채무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2009~10년 경제성장률이 높게 시현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한국경제 60년사>, 재인용.

(단위: 조 원, %)



자료 :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 자유기업원 보고서 No. 168

이는 주요국가의 국가채무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 비중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14.3	16.3	16.7	17.4	17.6	20.7	23.7	27.6	30.1	29.7	29	32.6
미국	49.7	44.1	42.2	38.8	39.1	38.7	40	43.4	43.3	42.6	61.3	75.1
일본	87.7	97	106.1	123.5	137.6	140.9	156.7	164.3	161.4	164.2	178.0	-
독일	26.1	34.1	34.1	34.6	36.1	37.7	39.2	40.4	40.9	39.4	38.8	43.8
영국	49.7	44.1	42.2	38.8	39.1	38.7	40	43.4	43.3	42.6	61.3	75.1
프랑스	46.3	47.8	47.4	48.3	49.9	51.9	52.6	53.3	52.1	52.1	54.2	60.8
그리스	103.7	103.6	108.9	109.7	109.2	105.8	108.3	110.3	107.5	105.8	109.6	125.7
아일랜드	47.8	44.1	34.8	30.9	27.9	26.9	25.4	23.6	20.3	19.8	27.7	46.0
스웨덴	72.0	64	56.9	48.6	46.8	47.7	46.6	46.2	42.3	36.4	35.5	37.8
호주	15.6	13.8	11.4	9.6	8.6	7.5	6.7	6.3	5.8	5.2	4.9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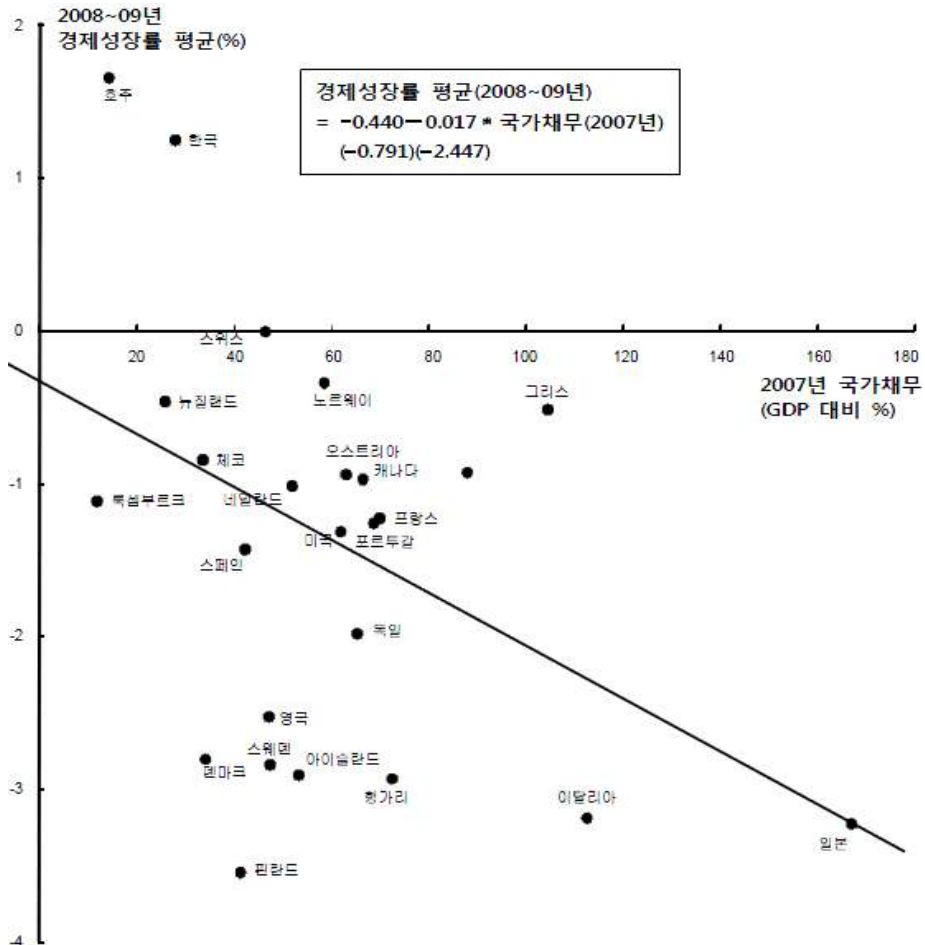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09

OECD 주요 10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2008년 말 기준 178.0%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가 125.7%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의 국가 간 비교는 각 국가의 상이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절대적인 채무액이 아닌, 각 국가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4.3%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2009년에는 32.6%로 상승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건전한 재정유지는 경제위기시 정부지출을 늘려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요국의 국가채무와 금융위기 여파가 집중된 2008~9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위에

선 논의한 대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평균경제성장률이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그림 3> 재정수지와 경제성장률 간의 회귀분석 결과



주: 회귀분석은 주요 25개국의 재정수지 및 경제성장률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안은 t 값을 의미함.

자료: OECD.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 위기 이전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고, 경제위기가 심화된 시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빠른 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재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재정 혹은 국가부채

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¹⁴⁾.

한편,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가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책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인 만큼 현 상황에 대응한 개별 정책의 효과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기존에 추정되었던 승수효과 등이 부정확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인 것인지 미리 판단하기 어렵고,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전에는 단일 수단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2. 현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구성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책,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재정건전화화를 위한 대응책 등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GDP 대비 재정수입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인프라, 교육, 보건, 연구개발, 사회복지, 환경보호)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출구전략 보다는 고용창출과 소비 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였다. 경기부양 기조는 유지하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일부 재정지출을 동결하고 세수증대 등 재정건전화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EU

14) 조성원(2009),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역시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 출구전략을 우선 시행하였다. 2009년 12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EU 집행위가 제시한 회원국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승인됨으로서 긴축재정 모드에 돌입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책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재정건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되었다.¹⁵⁾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와 카르멘 라인하르트(Carmen M. Reinhart)¹⁶⁾는 60개국 이상에서 지난 2세기 동안의 금융위기에 대해 작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해 선진국 경제와 중·저소득 국가에서 위기가 재발할 위험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정의되는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은 아주 오래 걸린다.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를 비교해 취약한 정도를 살펴보면, 외채 불이행에서 가장 차이가 나며 인플레이 위기에서는 차이가 조금 덜하다. 그리고 은행위기에서는 취약한 정도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것을 보였다.¹⁷⁾

통화폭락 또한 선진국 경제나 신흥 경제에서나 똑같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위기의 재발, 또는 재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와 관련된 재정정책 중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재정건전화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감세와 부채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정책조합을 선택하고 있다

15)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2010.03.10. KOTRA 발간 보고서

16) Kenneth Rogoff-Carmen M. Reinhart(2010), "This time is different: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Folly"

17) Kumar and Woo(2010)는 38개국의 1970~2007년의 자료를 패널방식으로 보다 엄밀히 분석하여 기간 초기의 공공부채가 이후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정책은 재정 적자와 부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모형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본 연구는 앞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재정 여력과 경제위기 에 대응한 재정지출 변화 정도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여력과 재정지출 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Peter Heller(2005)¹⁸⁾는 재정 여력을 “Fiscal space(as room in a government’s budget that allows it to provide resources for a desired purpose without jeopardizing the sustainability of its financial position or stability of the economy)”로 정의하였다. 재정 여력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 여력이 정부의 자원 가용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때, 예를 들어 정부부채 비율이 작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Fiscal

18) Peter Heller(2005), "Understanding Fiscal Space", IMF Policy Discussion Paper

space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GDP 대비 재정 지출로 두고 독립변수를 GDP 대비 정부부채로 본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로 GDP 대비 재정부채 비율, 물가상승률, 소득수준, 노령화 지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설계

1. 변수의 설정

1.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GDP에 대한 재정지출의 변화분으로 파악한다. 이미 G-20 국가를 비롯한 30여개 국가의 경우 2007년 시작된 경제위기에 대한 재정지출 요소의 변화와 증가분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각국의 정부지출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도출한 후, 추세선과 경제위기 당시인 2008~9년과의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경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종속변수는, GDP 대비 (정부지출-정부지출의 추세)가 된다.

1.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De Haan and Sturm(1997), Roubini and Sachs(1989a), Woo(2003), Tujula(2004)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을 이용하였다.

①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재정여력을 무엇으로 보고 계산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자원 가용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때 정부부채 비율이 작은 국가가 재정여력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각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로 삼는다.

② 노령인구 비율

노령인구 비율이 큰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작을 것으로 판단하여 노령인구 비율 역시 독립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③ GDP 성장률

한편, 경제위기 당시 GDP 성장률이 낮은 국가는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커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GDP 성장률 역시 독립변수가 된다.

④ 일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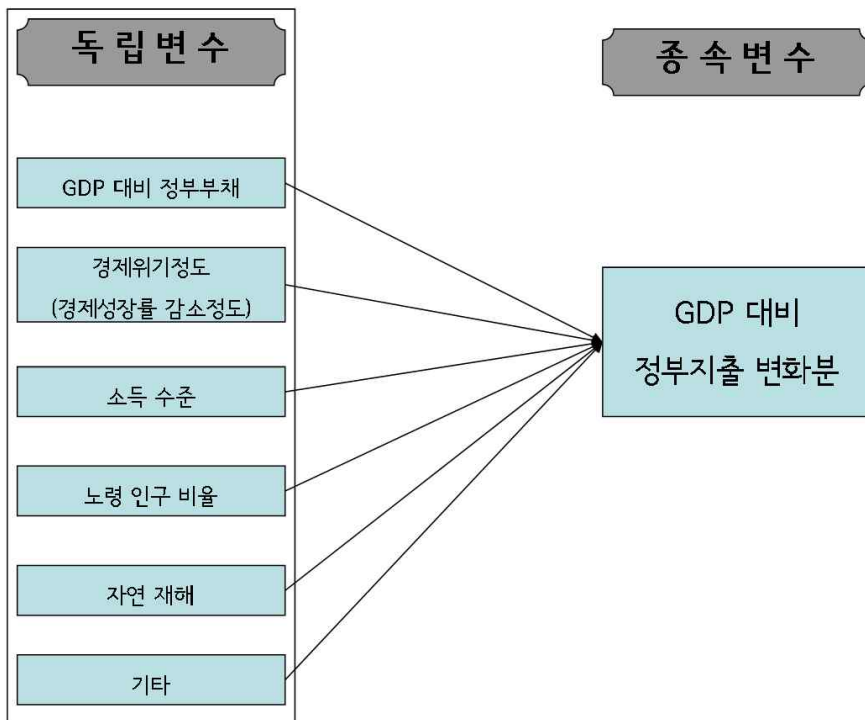
일인당 GDP는 각국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므로 이것이 큰 국가일수록 재정여력이 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점에서 일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⑤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정부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역시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된다.

2. 연구의 분석틀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앞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림 3>과 같은 틀 속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위기라는 특정 시점을 고려하여 다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둘 간의 영향관계를 밝힌 경우는 없었다.

연구의 분석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GDP 성장률, 일인당 GDP, 노령인구 비율 등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논문의 분석 데이터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온라인 오픈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세계은행 온라인 통계 데이터는 현재 각종 경제 및 금융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매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최근 연도로부터 2년 전의 수치까지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회원국 186 개국을 포함한 총 210여 국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친 세계 216개국의 정부지출과 일인당 GDP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다.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다. 변수에 따라 누락된 국가가 있어 실제 분석에 사용된 국가의 수는 이보다 제한된다. 또한 국가별 자료의 시간범주 역시 포함되는 변수에 따라 시기가 줄어들 수 있다. 변수들의 수집 시기가 겹치는 기간이 크지 않은 경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

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OECD Revenue Statistics의 자료를 사용하여 월드뱅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합성 관점에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이다.

<표 5> 변수들의 시기와 자료출처¹⁹⁾

변수	시기	자료출처
일인당 GDP	1990~ 2010	World Bank Database
GDP 성장률	1990~ 2010	World Bank Database
노령인구비율(old rate)	1990~ 2010	World Bank Database
물가상승률	1990~ 2010	World Bank Database
정부지출	1990~ 2010	World Bank Database
중앙정부부채비율	1990~ 2010	World Bank Database

종속변수인 정부지출은 각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정부지출을 사용한다. 연구의 초점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의 변화에 있고, 정부의 부채가 작은 국가는 재정여력이 큰

19) World Bank Database에서는 모든 국가의 자료가 가능하나, 연도에 따라 누락된 변수가 있는 국가의 경우는 자료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예: 북한,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등).

것으로 본다면 재정여력이 클수록 정부지출이 늘어날 것이므로, 가장 먼저 정부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노령인구 비율이 큰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작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독립변수에 음(-)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DP 성장률이 낮은 국가를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큰 국가로 이해할 때, 이들 국가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일인당 GDP는 한 국가의 경제상황 정도를 반영한다. 일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은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지출을 늘릴 여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역시 독립변수로 포함시켰으며 이는 정부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립변수와 이들의 기대부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독립변수와 기대부호

독립변수	기대부호
일인당 GDP	(+)
GDP 성장률	(-)
노령인구비율(old rate)	(-)
물가상승률	?

중앙정부부채비율	?
----------	---

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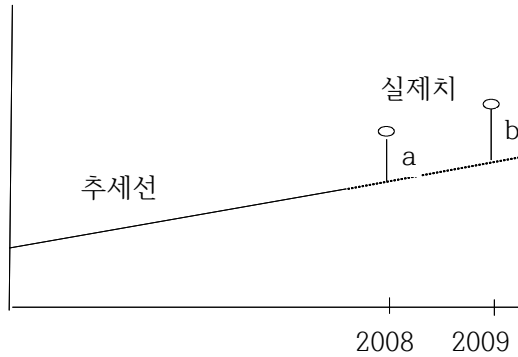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된 선형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 1 단계 :
$$\frac{\text{정부지출}}{GDP} = \pi + \rho X + \omega$$
 (1)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위기 이전의 각국의 시계열(1990~2006) 자료를 이용하여 위의 방정식 계수를 추정하여 추세선을 도출한다.

• 2 단계 : 2008년, 2009년 예측치와 실측치 차이를 계산하여, 2008년도 차이점을 a, 2009년도 차이점을 b로 둔다.

<그림 5> 종속변수의 계산 방법



• 3단계 : $\frac{(a \text{ or } b)}{GDP} = \alpha + \beta X + \gamma Z + \epsilon$

..... (2)

수식 (2)에서 종속변수를 나타내는 좌변의 (a or b)는 2008년과 2009년 경제위기 추세선에서 벗어난 정부지출 증가분을 나타낸다. X는 주요 독립변수인 GDP 대비 국가부채를 나타내며 Z는 그 밖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나타낸다. 마지막 항인 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종속변수인 경제위기 당시 (2008~2009) 정부지출의 추세선을 이용한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차이(gap)가 어떤 독립변수에 따라 무슨 방향으로 달라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 및 예비탐색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기에 앞서 먼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관찰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Year	648	2009	0.8171273	2008	2010
gov_sh	209	27.7852536	10.9002929	7.2143694	70.625224
gov_sh_p	320	27.1873532	10.8198869	6.3753134	70.625224
GDP_rate	383	2.0866007	5.2301172	-17.9549939	25.48
GDP_r_p	579	3.4070267	5.2495328	-17.9549939	26.75
old_rate	567	7.6007061	5.1840478	0.4273073	25.686876
inflation	560	6.0944481	9.0524606	-33.5851274	59.740386
GDP_cap	561	13961.15	22418.81	147.1539112	186242.93
gov_dept	154	52.5764415	33.4246349	2.9979336	185.66318
gov_hat	310	25.6944448	15.5957591	-104.692904	71.607888
gap	194	2.2687044	7.6727953	-28.952394	56.67847

각 변수의 연도별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경제위기가 심화된 시점인 2008년과 2009년에 정부지출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도에는 경제위기 이전 비율로 하락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령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2009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일인당 GDP 역시 경제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부채비율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 8> 각 변수의 연도별 기초통계량

	정부지출 비율	중앙정부 부채비율	GDP성장률	노령인 구비율(old rate)	물가상승 률	일인 당 GDP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1990	22.772 05156	64.55461 03	2.39815625 63	5.9878 0483	113.42110 559	6030. 5589 43
1991	25.376 63169	56.08031 31	1.07412073 7	6.0662 968	70.148103 947	6193. 5578 59
1992	23.904 57151	53.75903 86	0.06838260 27	6.1500 728	148.27230 917	6491. 9330 37
1993	23.968 64398	52.01797 68	0.95648778 89	6.2373 9633	209.86476 352	6249. 8369 05
1994	23.617 68205	55.87958 57	2.08666134 66	6.3257 9321	284.92148 622	6501. 1483 17
1995	27.579 05802	60.36906 34	3.77791860 91	6.4131 3249	46.138466 946	7444. 6681 12
1996	27.510 92014	61.49123 99	4.46525229 35	6.4971 7675	52.122355 594	7806. 7761

						56
1997	26.558 67133	59.74391 52	5.03712247 32	6.5776 5758	16.031558 062	7473. 3193 5
1998	25.796 80601	64.43487 87	3.80697059 07	6.6566 4203	27.340160 175	7741. 5275 11
1999	25.102 12847	67.02401 04	3.53601681 35	6.7380 0421	15.393388 586	8044. 9021 18
2000	25.8961 2966	57.648560 1	4.275983805	6.82418 906	15.1826728 86	7936.3 96599
2001	26.0217 6043	55.598087 6	3.567504070 7	6.91784 992	8.53621924 8	7764.9 75464
2002	26.0932 174	53.840479 9	3.153041447 9	7.01747 625	7.27134114 3	8254.7 54779
2003	26.0932 174	57.611103 7	3.827970769 8	7.11699 801	7.09941726 6	9513.6 37062
2004	25.7824 2677	57.012576 6	5.882672069 8	7.20797 289	6.99393728 6	10814. 83102 7
2005	24.8280 5456	52.342521 7	5.144788861	7.28546 18	7.52466494 9	11720. 63917
2006	25.5120 9475	50.063918 7	5.986954898 6	7.34740 01	8.12564230 5	12847. 53849 6
2007	25.5905 2072	47.807706 4	5.977319783	7.39837 064	7.11968967 2	14751. 29033 4
2008	26.7805 3556	51.390292 9	4.068471803 2	7.44777 798	9.81915051 5	15603. 11808 6
2009	28.3140 5147	54.925375 8	0.051977981 4	7.50817 94	1.67400307	13585. 42750 9
2010	25.7072 3927	48.004152 5	4.199861061 2	7.58827 642	6.45812890 6	11918. 29023 4

아래 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척도이다. 상관계수 r 은 $-1 \leq r \leq +1$ 의 값을 갖고

측정된 자료가 좌표 상에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깝다면 x 가 증가할 때 y 도 증가하면 그 때의 상관계수는 양(+)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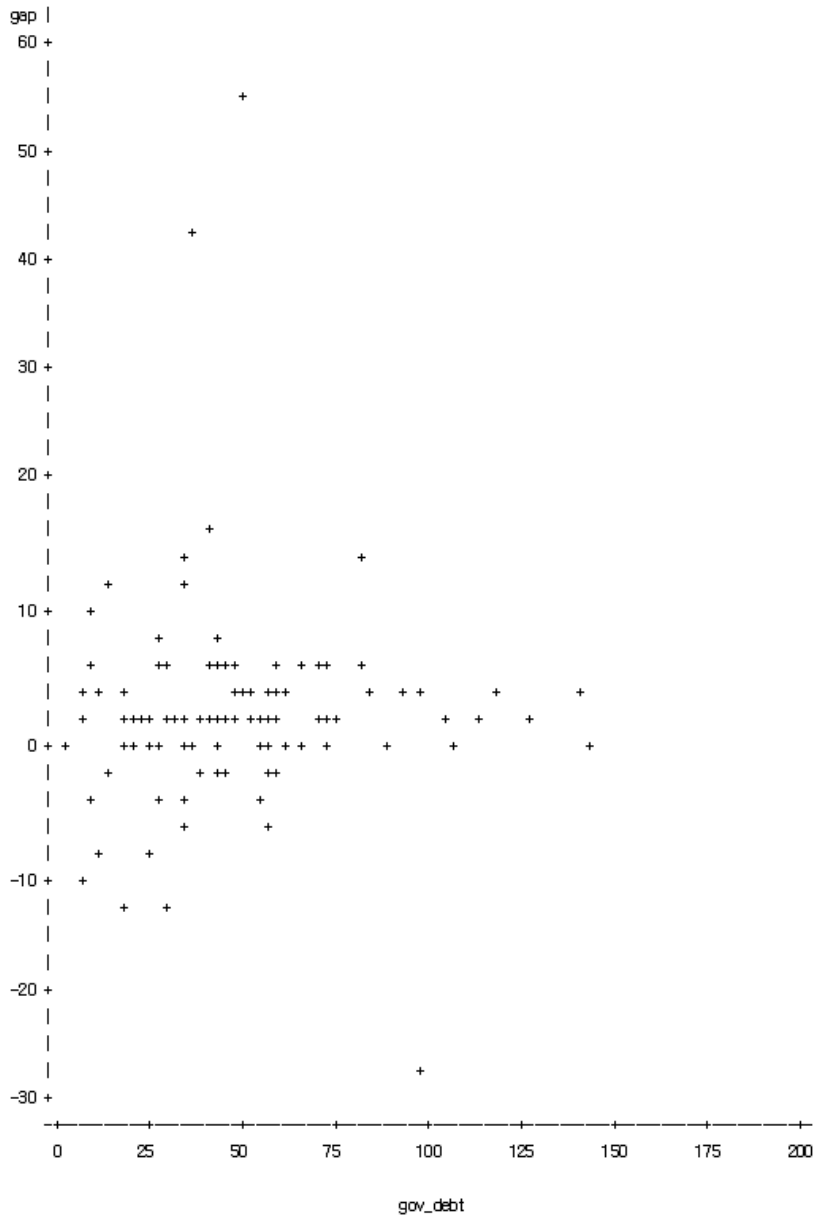
반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깝다면 음(-)의 상관계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선형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상관계수는 0에 가까워지게 된다. 선형의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선형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뿐이지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표 9> 변수들의 상관계수(피어슨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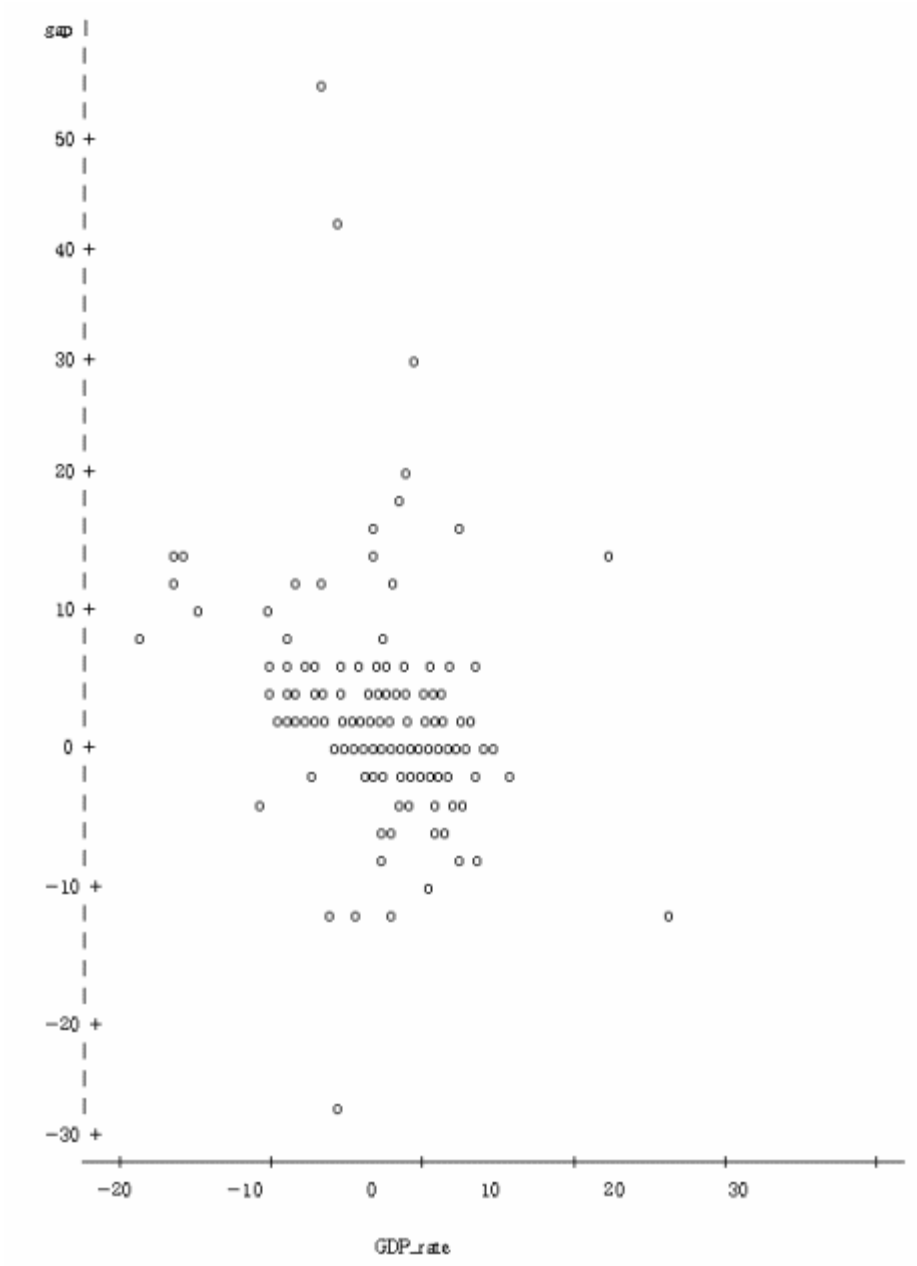
	gap (종속변수)	정부 부채비율	GDP성장 률	물가상승 률	노인인구 비율	일 인 당 GDP
gap (종속변수)	1	0.00371	-0.27676	-0.25867	0.13603	0.09074
		0.9693	0.0001	0.0003	0.0586	0.2083
정부 부채비율	0.00371	1	-0.16864	-0.14057	0.32414	15,579
	0.9693		0.0656	0.0821	<.0001	0.0537
GDP성 장률	-0.27676	-0.16864	1	0.53465	-0.47997	-0.19083
	-0.0001	0.0656		<.0001	<.0001	0.0002
물가상 승률	-0.25867	-0.14057	0.53465	1	-0.36448	-0.11491
	0.0003	0.0821	<.0001		<.0001	0.0066
노인인 구비율	0.13603	0.32414	-0.47997	-0.36448	1	0.58451

	0.0586	<.0001	<.0001	<.0001		<.0001
일인당 GDP	0.09074	0.15579	-0.19083	-0.11491	0.58451	1
	0.2083	0.0537	0.0002	0.0066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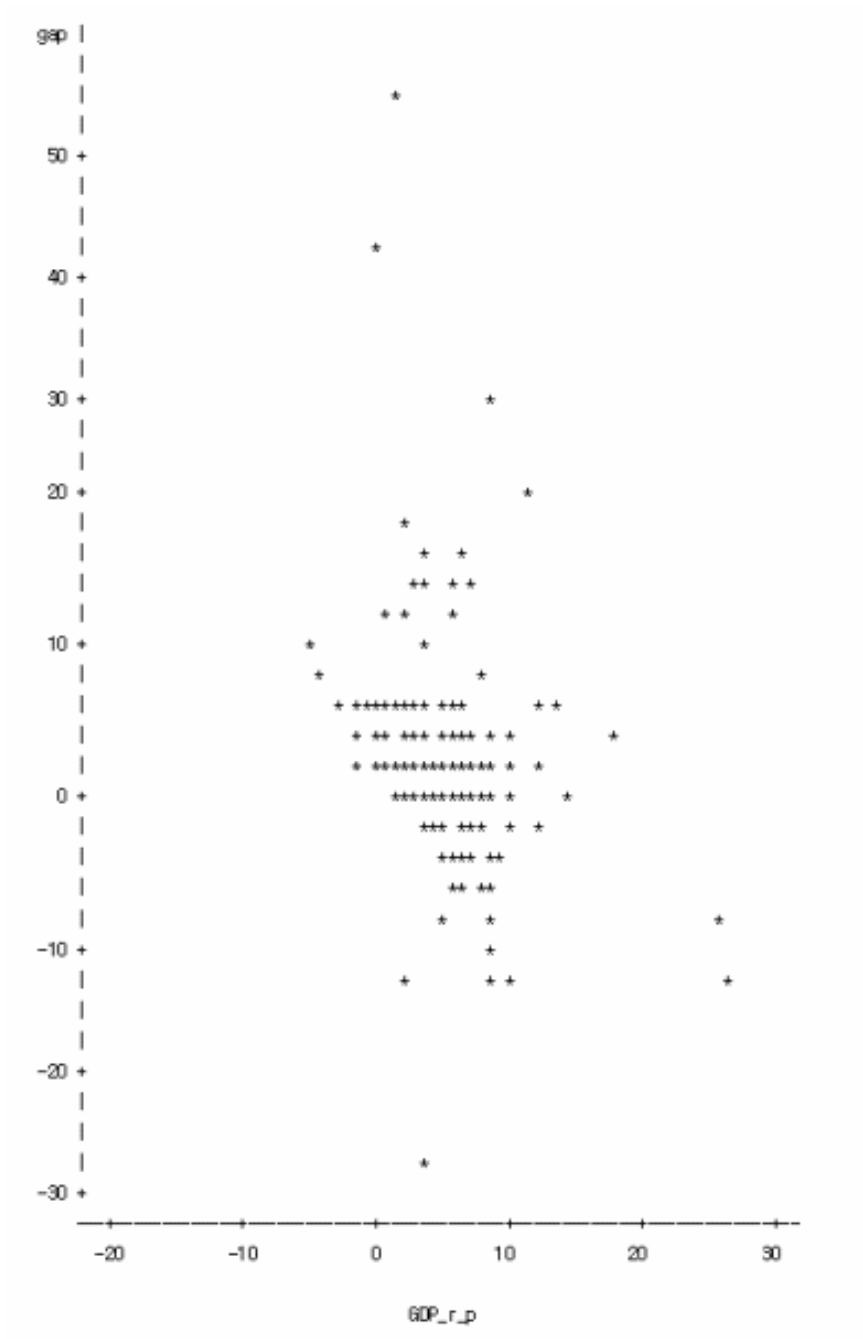
<그림 6> gap(중속변수)과 정부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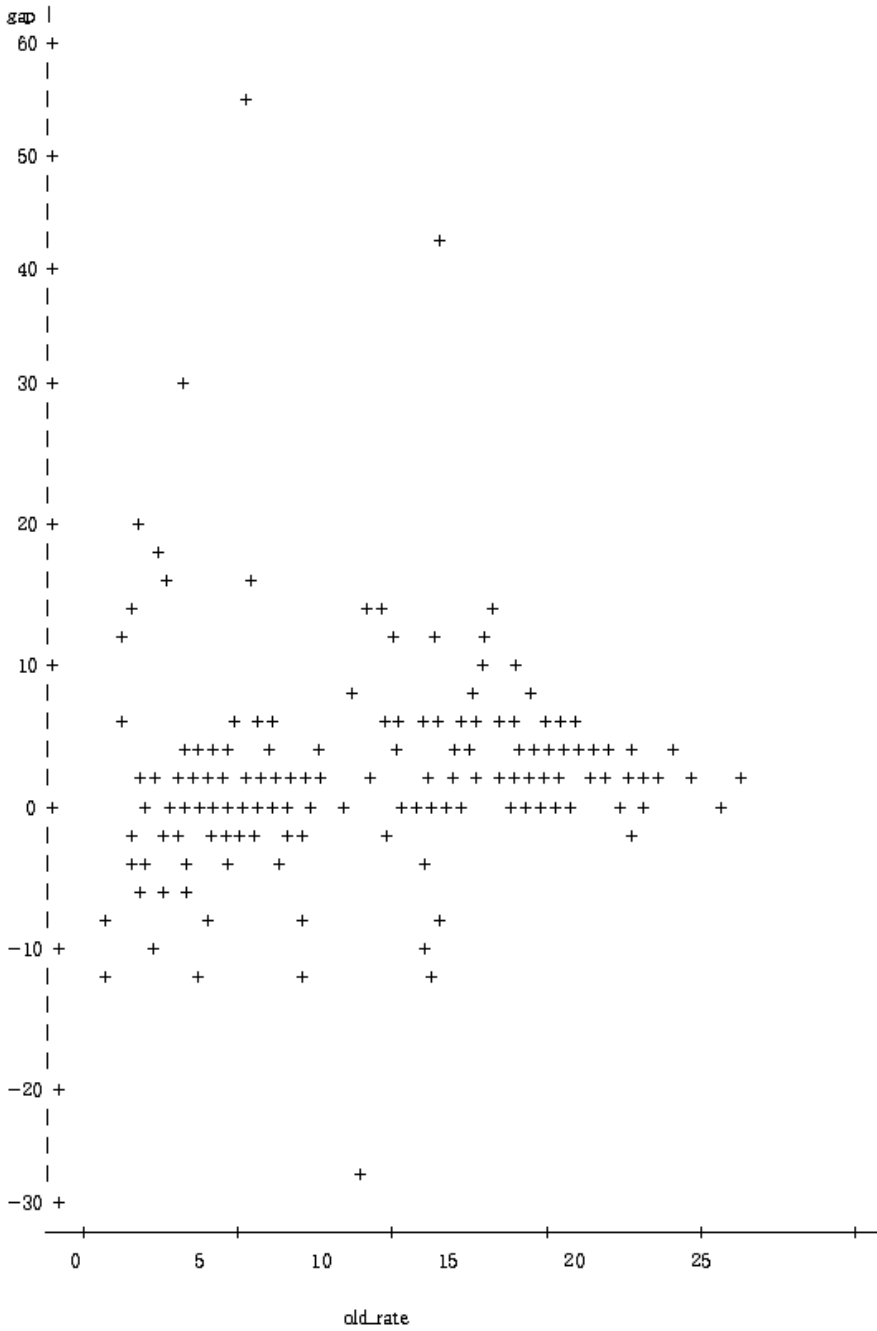
<그림 7> gap(중속변수)과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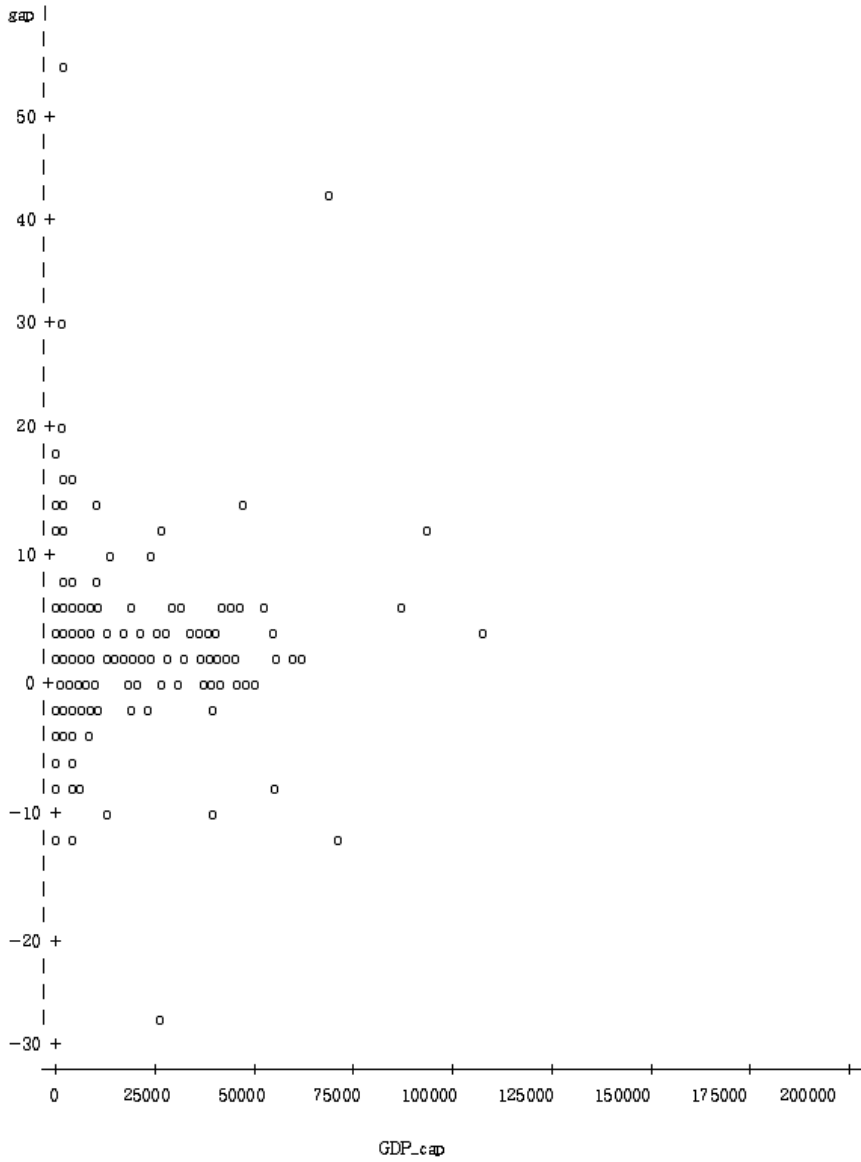
<그림 8> gap(중속변수)과 인플레이션



<그림 9> gap(중속변수)과 노령인구비율



<그림 10> gap(중속변수)과 일인당 GDP



제2절 모형의 추정결과

본 절에서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16개국의 1990~2007년까지의 정부지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도출한 다음, 경제위기 상황인 2008년과 2009년을 예측한 값과 실제 경제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각국의 정부지출의 실측치의 값(gap)을 종속변수로 하여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모형1>은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경제위기 당시(2008~2009) 정부지출의 추세선을 이용한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차이(gap)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부부채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GDP 성장률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나머지 변수들, 일인당 GDP 성장률과 노령인구 비율, 인플레이션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회귀분석모형 1

변수	변수의 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 의한 검정통계량	Pr> t
Intercept	6.1426**	2.99408	2.05	0.0427
정부부채비율	-0.01725	0.02749	-0.63	0.5318
GDP 성장률	-0.39191*	0.20381	-1.92	0.0572
인플레이션	-0.32689	0.2858	-1.14	0.2553

노령인구비율	-0.24281	0.20374	-1.19	0.2361
일인당 GDP	0.0000644	0.00004069	1.58	0.1165

*, **, ***: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정부부채와 GDP 성장률, 일인당 GDP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종속변수와 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회귀분석모형 2>는 회귀분석결과 정부부채비율과 종속변수인 경제위기 당시의 정부지출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GDP 성장률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인당 GDP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회귀분석모형 2

변수	변수의 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 의한 검정통계량	Pr > t
Intercept	2.17703	1.65166	1.32	0.1903
정부부채비율	-0.01673	0.02621	-0.64	0.5247
GDP 성장률	-0.43189***	0.16212	-2.66	0.0089
일인당 GDP	0.00003491	0.000034	1.54	0.1271

*, **, ***: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한편, GDP 성장률과 일인당 GDP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회귀분석모형 3>은 GDP 성장률과 일인당 GDP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회귀 분석 결과, GDP 성장률은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경제위기 당시(2008~2009) 정부지출의 추세선을 이용한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차이(gap)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위기가 심화된 시기인 2008~2009년에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일인당 GDP와 종속변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회귀분석모형 3

변수	변수의 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 의한 검정통계량	Pr> t
Intercept	2.65344***	0.72504	3.66	0.0003
GDP성장률	-0.37551***	0.10049	-3.74	0.0002
일 인 당 GDP	0.00001555	0.00002561	0.61	0.5444

***, **: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정부부채비율과 GDP 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추정한 <회귀분석모형4>의 분석결과, 정부부채비율과 종속변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GDP 성장률과 종속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회귀분석 모형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가 심화된 시점에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3> 회귀분석모형 4

변수	변수의 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 의한 검정통 계량	Pr> t
Intercept	3.18309**	1.52622	2.09	0.0394
정부부채 비율	-0.01076	0.02609	-0.41	0.6808
GDP 성 장률	-0.49377***	0.15805	-3.12	0.0023

*, **, ***: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마지막으로, 정부부채비율과 일인당 GDP를 동시에 고려하여 종속변수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회귀분석 모형 5>는, 분석 결과 정부부채비율과 종속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일인당 GDP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일인당 GDP가 높은 국가, 즉 경제상황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준다.

<표 14> 회귀분석모형 5

변수	변수의 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 의한 검정통계 량	Pr> t
Intercept	121,767*	165,722	0.73	0.4641
정부부채비율	-0.00962	0.02681	-0.36	0.7205
일인당 GDP	0.00007676**	0.00003476	2.21	0.0294

***, **: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첫 번째 분석의 경우, GDP 성장률과 종속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GDP 성장률과 종속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당시 큰 타격을

받아 GDP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국가일수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대부호 (-)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GDP 성장률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은 정부부채비율과 GDP 성장률, 일인당 GDP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정부부채비율과 종속변수인 경제위기 당시의 정부지출 변화분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자원가용능력을 재정 여력(Fiscal space)으로 보았을 때, 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정부부채비율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²⁰⁾

그동안 정부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는 경제위기시 이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회귀분석결과 GDP 성장률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은 정부부채비율보다는 GDP 성장률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분석은 GDP 성장률과 일인당 GDP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도 두 번째 분석과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이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령인구 비율의 경우, 정부부채비율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인 경제위기 시기의 정부지출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역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20)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채비율과 일인당 GDP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일인당 GDP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당시 일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시 이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각국의 경제상황정도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에 정부부채비율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표 15>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종속변수와의 영향관계	유의성
독립변수		
일인당 GDP	(+)	O
GDP 성장률	(-)	O
노령인구비율		
정부부채비율		
물가상승률		

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지출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접어들면서 실물경제위기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동반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세계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규모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심각한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기급락과 고용 위축을 완화하는 데 상당 수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¹⁾ 그러나 2012년 현재, 세계경제에는 여러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부지출의 강도를 조정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장기적인 목표는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는 언제 또 다시 닥칠지 모르므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전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부채비율과 종속변수인 경제위기 당시의 정부지출 변화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자원가용능력을 재정 여력(Fiscal Space)으로 보았을 때, 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정

21) 20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재정운용 규모는 50조원에 달하며, 확장적 통화정책과 병행되어 경기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함(2008년 KDI 경제동향 보고서)

부부채비율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GDP 성장률과 종속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당시 큰 타격을 받아 GDP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국가일수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렸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노령인구 비율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노령인구비율은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력 공급의 축소 및 저축률의 하락을 가져오고, 전통적인 생산함수에 있어서 투입요소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고령화는 이러한 요소투입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의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성장이 저하되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재정 여력 역시 영향을 받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

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되어 왔던 정부부채비율이 실증분석 결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1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연도에 따라 누락된 변수가 있는 국가들이 많아 이들은 자료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부채비율을 World Bank Database에서 제시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로 삼았으나, 국가별로 정부부채의 범주 개념이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실측된 자료를 보완하는 작업과 국가별 정부부채의 범위를 구별해내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 문헌 >

1. 국외 학술논문

Afonso A., Ebert W., Schuknecht L., Thone M., 2005, “Quality of Public Finances and Growth,” European Central Bank

Afonso A., Schuknecht L., Tanzi V., 2005. “Public Sector Efficienc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ublic Choice* 123, 321-327

Angelopoulos K., Philippopoulos, A., and Tsionas E., 2007, “The Growth effects of fiscal policy in Greece 1960-2000.” *Public Choice* 131, 157-175

Aleksashenko (2009), “*Crisis 2008,*”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vol. 51, no. 9, January 2009, pp. 33 - 50.

Barro, Robert J., 1989,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Working Paper 3120, Cambridge, Mass: NBER

Borcheding, Ferris and Garzoni, 2001, “Growth in the real size of Government since 1970,” *Carleton Economic Papers*

Grier, K.B., Tullock, G., 1989, “An Empirical Analysis of Cross-national Economics Growth 1951-80,”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4, 259-276

Grossman, P.J., 1988, “Growth in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the Australian Experience,” *Australian Economic*

Papers 27, 33-43

Grossman, P.J., 1988, "Government and Growth: A Non-linear Relationship," *Public Choice* 65, 217-227

Gylfason (2010) "Nordic in global crisi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Jitsuchon(2010) "fiscal policy issues in thailand aft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inance, Japan, Public Policy Review, Vol.6, No.4, April2010

Katzenstein(1985),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Kenneth Rogoff·Carmen M. Reinhart (2010), "This time is different: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Folly"

Landau, D. L., 1983. Govern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study. *Southern Economic Journal* 49, 783-792.

Landau. D. L., 1985. Govern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ed countries: 1952-76. *Public Choice* 47, 459-477.

Landau, D. L., 1986.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an empirical study for 1960-1980.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5, 34-75.

Lane(2003), "Understanding Bilateral Exchange Rate Volat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60, pp100-132

Lucas, R. 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3-42.

Peter Heller(2005), "Understanding Fiscal Space", IMF Policy Discussion Paper

Peter Gourevitch(1986), "Politics in Hard Time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2. 국내문헌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2010.03.10. KOTRA 발간 보고서

김상헌 (2007), "정부규모와 경제성장", 「정책&지식」포럼 제 328회

김상헌 (2009),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ITBI Review, 제15권1호(통권29호): 9-29,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김상헌 (2011),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학 연구동향", 한국재정학회

백웅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와 출구전략, 2009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백웅기, 서은숙,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 재정학 연구, 2010.

성태윤, 이영(2005),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경기안정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 19집 제 2호

안중범 (2009),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정부역할과 재정정책", 계간시대정신 2009년 봄호

이영(2011),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한양대
이철희(2009), “사회적 지출과 경제성장: 역사적 경험과 실증연구문
헌의 검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최광,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2009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최광, 이성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정준칙, 재정학 연
구,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Eunji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measures in response to the late-2000s economic crisis which was led from U.S. sub-prime mortgage crisi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Great Depression and Currency Crisis in that expanding government expenditure was the main solution. Many governments have announced that stimulus packages consist of different-sized tax cuts, government spending and the combination of them.

Though the debates on the government expenditure have for a long time attracted academia, there are still dissents about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Government expenditure responding to the late-2000s economic crisis. In this study, to show empirically what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are, how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government dept to GDP ratio, GDP growth rate and GDP per capita etc. affect the government expenditure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was analyzed.

The research methodology is as follows. To begin with, time trend line of government expenditure was withdrawn by using time series data of all the countries. Then, the gap between the time line and actual value of the year of 2008~9 (this year points out the late-2000s economic crisis) was investigated as an increase of government expenditure responding to crisis. Thus, GDP per (actual government expenditure-the time trend of government expenditure)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DP growth rate and the dependent variabl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direction of the negative. This conclusion supports that having a big hit during the economy crisis, expanding government expenditure corresponding the crisi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GDP per capita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direction of positive. With a view that GDP per capita reflects the economy

condition, a country having relatively good economy condition can afford to expand expenditure responding to the crisi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government debt and the dependent variable does not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Seeing through previous literatures, this result is not the same as them which concluded that the ratio of government debt is the specific factor determining government expenditure responding Crisis.

Despite these findings, this study faces with limitations such as the lack of precise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missing data. In the further study, the awareness and complement about these limitations should be made.

**Key words : economic crisis, government expenditure,
stimulus package, fiscal space**

Student Number : 2010-23849